

'여순사건특별법' 논의, 다음 임시국회로 연기

법안심사 소위 순번 32번째... 후순위 논의 안돼 지역 국회의원들, 3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 강조

2월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여순사건특별법'이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3일 전남 순천과 여수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남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여순사건특별법이 선행 안전인 정부조직법상 에너지 차관 신설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임시회로 연기됐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법안심사 소위의 32번째 안건으로 12번째 안건까지 논의가 이뤄지면서 다음 임시회 때도 선행안건의 논의가 길어지게 되면 소위 일정상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다음달 3일로 예상되는 소위의 법안심사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빠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앞서 소병철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들에게 지난 17일 여순사건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하고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 치유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으며, 11일 순천을 방문해 유족들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해 법안의 국회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국회에 전달한 탄원서에 서명한 유족이 721명이다"며 "그만큼 남은 유족이 얼마되지 않기에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돼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 일정상 논의가 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서 동부권 의원들이 만나서 재차 특별법 통과 의지를 강력히 했다"면서 "서영교 위원장과 한병도 간사도 특별법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다음 임시회에서 최대한 심사 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해 법안의 국회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국회에 전달한 탄원서에 서명한

유족이 721명이다"며 "그만큼 남은 유족이 얼마되지 않기에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돼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 일정상 논의가 되지 못해 안타까

운 상황에서 동부권 의원들이 만나서 재차 특별법 통과 의지를 강력히 했다"면서 "서영교 위원장과 한병도 간사도 특별법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다음 임시회에서 최대한 심사 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일부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건 관련 따로 대응 안 할 것"

통일부는 23일 일부 탈북민들이 이인영 장관을 '북한인권 증언 검증'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한 건과 관련해 별도로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장관의 발언이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인용됐으나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돕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런 일부 주장에 대해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 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조사와 기록을 충실하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수집하거나 인권 조사를 하다 보면 북한인권 관련 제도나 환경, 정책 변화를 증언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노력은 기록의 충실성이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에 대해 "북한인권 기록이 실제인지(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탈북민 4명은 이 발언이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뉴스스

與 "백신정쟁화 野 저급·유치... 3·1절 집회 단호히 대처"

김태년 "코로나 시국에 야당 부끄럽고 한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야 한다는 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저급한 백신 정쟁화가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로"라며 "코로나 시국에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유치한 백신 정쟁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야당의 정치공세는 국민 짜증만 유발할 뿐"이라며 "의학과 과학의 판단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점점 순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야당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면 정치권은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백신 개발 전부터 필요하면 먼저 맞겠다는 서약도 했다"며 "야당은 백

신을 끊임없이 정쟁화하는 방역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일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고도의 불안감을 조장해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켜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일부 보수단체가 3·1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한 단호한 대처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초래한 2차 확산으로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3차 대확산에 맞서 어렵게 방역을 지켜내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초래할 게 명백한 대규모 집회를 또 다시 열겠다는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자유는 없다"며 "극우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방해 위협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소병철 의원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농어촌·중소 인력난... 한시적 비자전용 제도 개선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 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용 외국인은 단 223명에 불과했다.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수월하지 않아, 농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건설업 분야에서도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결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개방적인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양육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하는 소위 '구하라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법무부도 최근 '구하라법'의 법무부안(「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소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사회적인 사건들을 보면 자식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갑작스런 사고가 많은데, (법무부 안처럼) 사전에 상속 제한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